

경제 규제혁신 TF
22-1
(공개)

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

2022. 7. 28.

관 계 부 처 합 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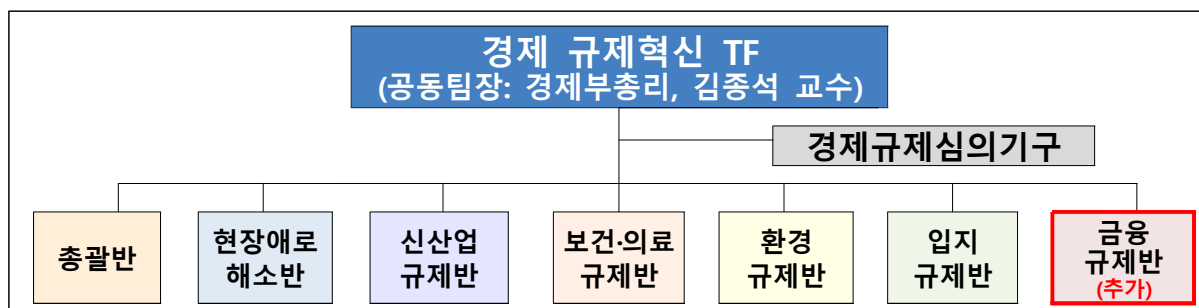
순 서

I . 추진 경과	1
II . 주요 특징	2
III .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	3
IV . 향후 계획	12
〈참고 1〉 기타 과제 주요 내용	13
〈참고 2〉 과제별 추진 계획	15
〈참고 3〉 과제별 부처 담당자	19

I. 추진 경과

◇ 정부는 6.23일 발표한 「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」에 따라 지난 1개월간 민관협력下 경제분야 핵심 규제혁신과제 발굴에 전력

- ① 6.2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「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」을 마련
 - 정부 주도가 아닌, 민간 중심의 협의체(TF)를 구성·운영하기로 결정
- ② 관계부처·학계·경제단체 등 각계 추천을 받아 규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「경제 규제혁신 TF」 및 7개 작업반 구성
 - TF는 경제부총리·민간 전문가가 공동팀장 역임, 정부위원(11명)보다 많은 민간위원(12명)으로 구성
 - 7개 작업반*은 작업반장 부처를 중심으로 위원 구성 및 운영
 - * 당초 6개 작업반을 운영할 계획 → 금융규제혁신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규제반도 추가
- ③ 6~7월중 작업반 회의, 쟁점조정회의 등 1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핵심 규제혁신 과제별 세부 개선방안·추진계획 논의
 - 수요자 중심, 전방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핵심규제 선정 + 대한상의·전경련* 등으로부터 현장이 원하는 과제도 추가발굴
 - * 대한상의(7.1일, 100건), 전경련(7.18일, 103건)은 TF에 규제건의 제출 → TF의 기존 검토과제와 중복되는 과제 등을 제외한 130여건 과제 검토中
- ④ 7.9일 즉시개선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과제*(50건)에 대해 경제규제심의기구 검토 진행 → 1차 개선과제 50건 도출
 - *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규제심의위원(학계·기업·연구기관 등)이 과제별로 검토



II. 주요 특징

◇ 단기간(1개월) 집중 논의를 거쳐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한 1.6조원 투자 유도 등 민간 주도 가시적 성과 창출

① 현장대기 프로젝트 해소 주력

→ 금번 대책으로 **민간 투자 1.6조원+ α ↑** 창출

- 복잡한 규제 및 규제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공장착공 등 투자 집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해소에 총력
- 금번 대책으로 3건의 현장애로를 해소 → 1.6조원 투자 기대, 즉시 우리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

* (A기업) 조선소 협동로봇 안전성 규제개선 → **3.2천억원** 투자
(B기업)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시설 산단 입주 허용 → **3천억원** 투자
(C기업) 생분해플라스틱 활용기반 마련 → **1조원** 투자(~'30)

② 단기간(1개월) 內 집중 논의를 통해 가시적 성과물을 도출

- 국민의 안전·건강 등을 제외한 모든 핵심규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집중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
 - 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, 신속한 협의를 통해 신산업, 환경, 보건·의료, 금융 등 6개 분야 50건의 과제를 발굴
- 다만, 단순 개수 위주의 규제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현장의 절절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

③ 규제혁신 초 과정에서 민간이 주도적 역할 수행

- 경제 규제혁신 TF에 정부위원(11명)보다 많은 민간위원(12명) 구성
-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* 사전 검토 진행

* 기업·협단체·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를 **과제별 심의위원**(총리실 규제심의위원 pool 활용)으로 **배정** →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적정성 판단

Ⅲ.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

- ◇ 신산업, 보건·의료, 환경 등 분야의 규제가 과도한 규제비용 유발 등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는 동시에, 경영 불확실성을 심화
- 현장애로 해소, 신산업 창출, 보건·의료 혁신, 환경/입지/금융 등 6개 분야별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 우선 추진

1. 분야별 규제혁신 여건

① (현장애로) 기업현장의 규제로 인한 투자대기·인력부족 등 애로 호소

- (대기업) 복잡한 규제, 신산업 환경을 뒷받침할 제도 미비 등으로 투자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* 다수 존재
- * 지능형 조선소(스마트 야드), 생분해플라스틱 등 분야 시설·기술 투자 등
- (중소기업) 입찰제한 중복제재 부담 등으로 기업활동이 제약 받고 있으며, 자금조달 등 관련 애로사항도 제기

② (新산업) 시장에 뒤쳐진 규제·정부개입 🖱️ 민간 자율·창의 발현 제약

- 시장의 기술발전·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제도와 규제* → 모빌리티, 친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新시장·新비즈니스 창출 제약

* '21년 OECD 38개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,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

- 반면, 美·英 등 주요국은 민간 자율성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의 성공사례* 창출

* ①스타십(美) 배달로봇 300만건↑ 배달, 주행거리 600만km↑ ②윙(美) 최초 드론배송 상용화
③아모지(美)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등 46백만불 투자 유치('22.6월)
④존슨매티(英)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에 95.9백만불 투자 예정('22.7월)

③ (보건·의료)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시장·투자 창출 지체

- 저출산·고령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*가 확대되고 있으나 엄격한 관리기준 등으로 시장 창출 지체

* 디지털 헬스케어, 비대면 건강관리, 의약품 온라인판매, 의료 마이데이터 등
[코로나後 유망 신산업('20, 전경련) : 1위 헬스케어(31.9%), 2위 교육(19.4%), 3위 AI(8.3%)]

- 국내 기업도 규제로 인하여 해외에 先進출*하는 등 국내 투자 위축 사례

* 원격의료·상담(네오펙트, 라인), 헬스케어(눔) 등 美·日 등에서 먼저 서비스 출시

④ (환경) 규제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기업활동 제약

-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크거나 민간의 창의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사업화 애로

* (예) 반도체 생산설비는 밀폐형으로 수입 → 설비 내부의 배관 설비 등 기준 검사 등에 애로

- 순환경제·신재생에너지 등 활성화를 위한 현행 제도도 엄격한 요건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

* 국가 폐기물 발생량 1.9억톤 중 0.8%(169만톤)만이 순환자원 인정('20)

⑤ (입지) 입지조건·업종 등 현장수요와 괴리된 규제로 민간활동 제한

- 기업의 산업단지·항만배후단지 등 입주시 입주조건·업종 등 규제*로 인하여 산업활동 제약

* 서비스업 산단 입주 제한, 제조업체 항만 입주 자격요건(수출입실적 일정 수준 이상 필요) 등

- 개발행위제한이 있는 영역에 대한 규제*가 여가·관광 및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등 지역민 불편 초래

* (숲속야영장) 숲속의 집에 화장실 설치 불가, (공익용산지) 농업용수개발시설 설치 불가

⑥ (금융) 아날로그 시대 규제 유지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체

- 금융환경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, 핀테크 등의 과도한 금융업 진입장벽 등으로 新금융 서비스 출시에 걸림돌*

* (예) 소규모 결제대금예치업자에 대한 높은 자본금 요건(3~5억원)이 부담으로 작용

2. 분야별 주요과제

① (현장애로 해소) 불확실성 해소, 규제 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 투자활력 제고

[투자 프로젝트 촉진]

① 조선소 등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

* 현행 한국산업표준(KS) 등 안전성 기준은 작업안전과 관련성 낮은 전자파, 전기연결상태 등 다수의 복잡한 요건 충족을 요구

[기대효과]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한 3.2천억원 투자 집행(A기업) + 협동로봇 도입 활성화로 고위험작업 효율적 대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
②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코드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 + 同생산업종의 산업분류코드 명확화

[기대효과]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(B기업)의 산단입주가 허용되어 3천억원 투자 집행 가능 + 산단입주 등과 관련된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 해소

③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집중적 활용 필요분야 선정기준* 설정 및 적용대상 제품군 확정 등 활용기반 마련

* (예) 제품 특성상 자원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(음식물쓰레기 봉투 등)

[기대효과] 생분해플라스틱 시설투자 등 '30년까지 1조원 투자 계획(C기업) + 집중 적용대상 제품군에 대한 의무 사용 규정 마련 등으로 관련 산업 안정적 육성

[中企 부담완화 및 금융지원 확대]

④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등 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당행위에 따른 국가계약법-판로지원법상 중복제재 가능성 해소

[기대효과] 동일 부정당행위에 대한 이중제재 부담 완화('21년 국가·지방계약법 위반기업 1,400여개) + 기업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

- ⑤ 신보 보증시,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기업에 대해 창업기업에 준하여 매출액 급감 등 요건에 따른 보증제한* 미적용

* 현재는 당기 매출이 30% 이상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 제한

[기대효과] 유턴기업 신보 보증비중 확대(10%대 → 15% 이상), 조기정착 지원

[우수 외국인력 유입 촉진]

- ⑥ 첨단분야(디지털전자, 나노, 바이오, 신소재, ICT·SW 등) 전공 외국인 재학생의 국내인턴 비자*와 전문 해외인력에 대한 네거티브 비자** 신설

* (現) 해외대학 외국인 재학생은 국내 인턴활동 불가능 →

(改) 해외 우수대학(예 : Time誌 세계 200대) 첨단분야 전공 재학생 인턴 허용

** (現) 92개 직종만 취업 허용(포지티브 규제) → (改) 고소득자,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(일정 소득·학력요건 충족시)는 단순노무직 등 제외하고 자유로운 직종 허용

[기대효과] 해외의 첨단분야 우수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활용

② (新산업) 혁신모빌리티·친환경 등 中企·벤처 비즈니스 기회 창출

[혁신 모빌리티 활성화]

- ① 안전성 기준(속도, 크기 등)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(배달로봇 등)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(人道) 주행 허용

*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동행자가 필요하며 보도 통행 불가

※ 7.2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「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」에 과제로 포함

[기대효과] 자율주행로봇 세계시장('30년 222억달러 규모, 전체 배송종 배달로봇 비중 20% 전망) 경쟁우위 기반 마련 + 관리자 동행의무 등 불편 해소 + 물류체계 효율성 제고

- ②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를 '전수검사 → 모델별검사'로 전환하여 검사기간을 단축하고, 드론 활용 개인식별정보 수집 기준* 마련

* 불빛 등으로 촬영사실을 표시하고, 정보주체가 촬영사실 인지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촬영을 허용

[기대효과] 드론 안전성인증 소요기간 단축(2개월→2주), 검사비용 50%↓(연 3억원 절감) + 드론 활용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이용 유도 + 위험시설(도시가스 배관) 점검 등에 드론 활용

- ③ 허용지역이 농어촌 등으로 한정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*을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지역으로 확대

* 노선을 정하지 않고 운행구간·정류장·시간 등을 여객수요에 따라 운용하는 운송서비스

[기대효과] 대중교통 부족지역 주민의 대기시간 단축 등 이동편의 제고

- ④ 정비 사업장 외에서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(OTA*)을 통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** SW 업데이트를 허용 + 업데이트 가이드라인 마련

* Over The Air : 새로운 소프트웨어, 설정 등을 무선으로 배포

- 현대, 르노삼성, 기아 등 11개 업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운영 중

** (예) 유무선통신장치, 구동계·샤시·바디·전원·에어백제어장치, 조향장치 등

[기대효과] 전기차 등 차량소비자의 정비 편의 제고

[친환경에너지 확산]

- ⑤ 이동식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기준(내충격성, 내진동성 등) 마련

* 현재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기준이 있어 인증 가능, 이동식 충전기는 기준 부재로 인증 불가

[기대효과]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충전시장('25년까지 8천억원 규모 전망)에 대응하여 새로운 충전서비스 시장 선도 기반 마련 + 전기차 소유자 충전 편의 제고

- ⑥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·운항 등에 필요한 검사기준 마련

* 현재 암모니아 추진선은 건조 및 운항 검사기준 부재로 건조·운항 불가

[기대효과] 친환경선박산업 시장 창출 기여('30년까지 생산유발 효과 11조원 전망) + 수소 대비 우수한 저장·운송특성 가진 암모니아 관련 신산업 창출 및 선도

- ⑦ 친환경차가 세제감면* 및 보조금**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고시 등재 및 성능평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

* (現) 에너지소비효율 신고, 저공해차인증 신청후 기술적 세부사항 심사 후 고시 등재
→ (改) 에너지소비효율 신고, 저공해차인증 신청시 고시 등재 심사 동시 진행

** 성능평가지 정상운행 확인을 위해 필요한 방치기간(16일 이상)을 단축

[기대효과] 세제감면(2개월→1개월), 보조금(1개월→15일) 절차 소요기간 단축 +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

⑧ 재생에너지 설비(풍력·태양광 등) 이격거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(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설정 → 필요시 상한선 법제화)

- * 현재 이격거리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없이 개별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규정중 → 태양광 100~1,000m, 풍력 100~2,000m 등 지자체별로 상이, 일부 지자체는 과도한 거리 설정(22.4월)

[기대효과] 재생에너지 설치가능 지역 확대로 발전사업자 사업환경 개선 +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
⑨ 학교, 아파트,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하이브리드(태양광+풍력) 동시 전력시스템 설치 허용

- *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작물 축조시설 신고로 옥상 설치가 가능하나, 풍력 발전시설은 설치 규정이 없어 설치가 제한

[기대효과]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+ 사업자 전기요금 절감

⑩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튜브 트레일러(수소운반차량)를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하는 것을 허용

- * 현재 수소운반차량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여 임대행위 금지

[기대효과] 수소 공급 활성화 및 공급단가 인하

[3] (보건·의료) 新의료기기·서비스, 의약품·식품 등 규제 완화

[新의료기기·서비스 확산]

①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위한 사용 기준 마련

- *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이동검진차량·도서벽지에 한정되어 사용 가능

[기대효과] 재난·응급상황 등 즉각 대응 가능 + 산업 활성화 기대(업체당 수출 年 700억원 및 내수판매 年 80억원 창출 예상)

- * 최근 이동형 엑스선 장비 업체 주요 계약: D기업(2,000억원, 7월) E기업(1,700억원, 3월)

② 의료행위와의 구분이 어려워 의료법 위반 소지 등 불확실성이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* 및 판단기준 명확화

- *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개별 민원, 유권해석 회신 사례 공개

[기대효과]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활성화, 불확실성 해소

- * 약 6천억원 규모('21년 기준)인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기여

[의약품·식품 규제완화]

- ③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·백화점 등에서 자유로이 판매하도록 허용*
(현재는 사전신고 필요)하고,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

*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고,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포장 그대로 단순 판매할 경우 신고 면제

[기대효과] 영업신고 비용 1.7억원↓ +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 및 고용 창출 + 개인의 생활습관·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창출

- ④ 인체조직물류 폐기물 중 폐지방, 폐치아를 재활용이 금지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체계적인 재활용 체계 마련

[기대효과] 인체유래 의약·의약외품 개발 기반 마련 → 의료기술 발전, 신산업 창출 기대
* 대구 규제자유특구에서 폐지방을 활용한 인체유래 콜라겐 제품·창상피복재·바이오잉크 등 개발 실증사업 진행 중('19.8~'23.8월)

④ (환경) 新산업화 및 순환경제·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환경규제 합리화

- ①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(국제 인증설비에 대한 기준 인정 및 시설기준 간소화)

※ 7.21일 산업부가 발표한 「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」에 과제로 포함

[기대효과] 취급시설 설치검사 기간·물량의 단축으로 시설의 조속한 가동 지원

- ②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 확대,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세부기준 마련 등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 정비

* 현행 재활용 규정에는 열분해유·가스의 원료 사용에 대한 명시적 내용 부재

[기대효과]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(플라스틱 등)로도 재활용 가능 + 소각·매립을 줄이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기여
* 플라스틱 1톤 생산시 원유 대비 CO2 배출량 85% 이상 감축 효과(원유 기반 2.3톤 vs 폐플라스틱 재활용 0.3톤) (독일 싱크탱크 Agora)

- ③ 커피박(찌꺼기) 재활용 유형 확대(現 나무제품, 비료 등 제조 → 改 발전연료·축사 깔개로 사용, 벽돌 등 제조에 활용 추가)

* 커피박 발생량 : ('12) 93,397톤 → ('19) 149,038톤 추정(국회입법조사처)

[기대효과] 소각·매립 대신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·다용도 활용 기대
* 커피박 1톤 소각시 탄소배출량 338kg

- ④ 전기·전자제품 제조업자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재활용 재생원료(합성수지류)*를 다음연도 재활용의무량**에서 감면

* 현재는 폐전기·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재생원료 사용만 재활용으로 인정

**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가 자사 출고 제품의 폐기물 중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양

[기대효과] 합성수지 등의 재활용 확대 통한 탄소배출 저감 및 순환경제 활성화

⑤ (입지) 입지조건·개발행위제한 완화로 생산·경영활동 지원

[산단 등 입지조건 완화]

- ①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* 확대

(현행 : 산단의 산업시설구역 면적의 30% 이내 → 개선 : 50% 이내)

* 제한업종(농업, 도박업, 건설업 등)을 제외한 모든 산업 입주가 허용되는 지구

※ 7.12일 산업부가 발표한 「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」에 과제로 포함

[기대효과] 제조업-서비스업간 융복합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촉진 및 비수도권 산업단지 활성화 기대

- ② 수출입 제조기업의 1종 항만배후단지(항만에서 수출입되는 화물의 조립가공, 제조, 물류기업 등이 입주) 입주요건을 완화*

* (現) 매출액 대비 해당 항만 수출입실적 20% 이상 →

(改) 매출액 대비 수출입실적 20% 이상

[기대효과] 항만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창출 및 물류 활성화

- ③ 해양산업 클러스터* 지정요건 중 최소 면적요건을 완화

(현행 10만 m^2 → 개선 3만 m^2)

* 수산·해운·에너지·환경·관광 등 해양(연관)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유희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지정·조성된 지역

[기대효과] 유희항만 등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부가가치 및 신규일자리 창출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

[개발행위제한 완화]

- ④ 숲속야영장 내 일정규모 이하의 숲속의 집(건축물 총 바닥면적 400 m^2 이하)을 설치할 경우 화장실·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 허용

[기대효과]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이용객(연간 약 11만명)의 편의 제고

- ⑤ 공익용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지원을 위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를 허용

[기대효과] 임산물 재배임가(약 8만가구)에 대한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및 가뭄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

⑥ (금융) 신규 금융서비스·상품 창출 원활화 및 소비자 편의성 향상

[新금융 서비스 확대]

- ① 용역거래(청소, 이사, 인테리어 등) 안심결제 등을 지원하는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하향 조정*

* (現) 분기별 거래액 30억원 이하 3억원 / 30억원 초과 5억원 →
(改) 분기별 가맹점 정산액 30억원 이하 등록면제 / 30~100억원 25억원 / 100억원 이상 5억원

[기대효과]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 사업자가 보다 쉽게 결제대금 예치업에 진입하여 안심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

- ②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·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·개발 등을 하는 경우 망분리 규제* 미적용

* 현재 금융전산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사의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시스템을 외부망과 분리하여 접속을 제한 → 인터넷 공개 소프트웨어·데이터 활용 제약

[기대효과] 오픈소스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·서비스 개발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

[금융 소비자 편의 제고]

- ③ 모바일 단독카드(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발급)의 발급대상 카드를 법인개별카드(법인 임직원 중 지정된 자만 사용 가능한 카드)로 확대

* 현재는 개인카드만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이 허용

[기대효과] 기업 등의 카드 발급 및 이용 편의성 증대

- ④ 50세대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·AI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 허용

[기대효과]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 자제 경향 완화로 금융 접근성 제고

IV. 향후 계획

① 규제 소관 부처 책임下 50개 규제혁신과제 신속 이행

- 규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금번 50개 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
- TF 內 작업반에서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*
 - * (월2회) 총괄, 현장애로, 신산업, 환경 (월1회+정기 토론회) 보건의료 (수시) 입지, 금융
- 필요시, 작업반별 과제 추진현황을 TF 안전으로 상정·발표

② 경제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

- 경제 규제혁신 TF - TF 內 7개 작업반 - 부처별 규제TF 등 경제분야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과제 지속 발굴
- 기업, 협단체(대한상의·중기중앙회 등), 연구기관(KDI 등)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·시장수요가 큰 과제발굴에 집중
 - 특히, 기업 면담·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대기 프로젝트 과제를 추가 발굴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
- TF 총괄반을 중심으로 인증제도·그림자 규제 개선도 본격 추진
 - * 경제단체, 협회, 중기부 등 규제 수요부처를 통해 인증·그림자 규제 과제 발굴 중

③ 국민 관심이 높은 핵심 과제에 대한 합리적 결론도 조속히 도출

- 국민 관심도가 높으나,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필요성 지속 검토
- 국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,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

◆ 경제 규제혁신 TF를 시작으로,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분야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 및 적기 추진

👉 8월중 차기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추진(잠정)

참고 1

기타 과제 주요 내용

번호	과제	주요 내용	부처
1	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·운영 규제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(현황) 기술지주회사 설립시&설립후 현물출자가 자본금 30% 초과 의무 ◇ (개선) 설립 이후에는 현물출자비율을 10% 수준 완화 (설립시는 30% 유지) ◇ (기대효과) 3년간 현금투자 규모 누적 500억원* 확대 기대 * 현물출자비율 30% 내외('22.3)인 기술지주회사의 투자가능 규모 합산 	교육부
2	대기업 참여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(현황) 벤처투자조합은 대기업 제작수익지분이 30% 미만인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에만 투자 가능 ◇ (개선) 대기업 제작수익지분 상한을 40%로 완화 ◇ (기대효과) 콘텐츠 제작·유통 활성화 및 중소제작사 자금난 해소 	중기부 문체부
3	호텔업 등급 결정기준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(현황) 등급별(1·2성/3성/4성/5성) 신청 가능하며, 미달시 다른 등급으로 재신청 필요 / 평가항목에 주관성 개입 여지(예 : 교통시설 예약서비스 부분 제공 기준 모호) ◇ (개선) 신청가능 등급을 통합(1~3성/4~5성) + 주관성 개입 여지 항목 조정(축소 또는 삭제) ◇ (기대효과) 연간 재신청 감소(약 70개소), 평가료 약 1.5억원 절감 	문체부
4	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(현황) 원격제어기능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부재(원격 기능 없는 차단기만 기준 有) ◇ (개선) 안전기준(차단기 기준, 자동복구·원격복구 기능 기준 등) 마련 ◇ (기대효과) 새로운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시장 창출 및 산업융합 활성화 	산업부 과기부
5	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 개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(현황) 정부 앱(모바일 신분증)을 통해서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등 활용 가능 ◇ (개선)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민간 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◇ (기대효과)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편의 제고 	행안부 경찰청 과기부
6	행정·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(현황)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시 주민번호 노출 방지를 위해 이용자 식별을 위한 연계정보(CI) 변환이 필요하나 근거 부재 ◇ (개선) 주민번호를 연계정보(CI)로 일괄변환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◇ (기대효과)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	방통위 과기부

7	외국어표기 의료광고 허용지역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(현황) 외국어표기 의료광고 허용지역 제한 중(면세점, 국제공항, 국제무역항 등) ◇ (개선) 일정요건(외국인환자 규모, 의료기관수 등) 충족 관광특구까지 광고 허용 확대 ◇ (기대효과)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	복지부 문체부
8	의료협동조합 인가요건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(현황) 의료사협 인가요건 충족 어려움(출자금 1억원&총자산 50% 이상 납입 등) ◇ (개선) 인가요건 완화(50% 이상 납입 의무 삭제) ◇ (기대효과) 의료협동조합 설립·사업확장 촉진 통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질 제고 	기재부 공정위 복지부
9	공유미용실 제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(현황) 동일영업장 내 미용업은 각각 필요한 시설·설비 완비 필요 ◇ (개선) 각 영업자 각각 영업신고시 일부 시설·설비 공유 가능 ◇ (기대효과) 공유미용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대 	복지부
10	민통선 이북 산지 치유의숲 허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(현황) 민통선 이북 보전산지에서 치유의 숲 조성 불가 ◇ (개선) 치유의 숲 조성 허용 ◇ (기대효과) 민북지역 내 산림치유 기회 부여로 삶의 질 제고 	산림청
11	문화재 보호구역 개발행위 관련 규제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(현황)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발행위 제한 ◇ (개선) 개발행위 허용기준 마련시 문화재의 가치 외 주변개발수요,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관련규정(허용기준 작성지침) 개정 ◇ (기대효과) 국민생활 불편 및 부담 경감, 재산권 침해 등 해소 	문화재청
12	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(현황) 금융 마이데이터 제공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, 구체적인 제공정보 범위는 관련 업권이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TF를 통해 업권간 협의 등을 거쳐 결정 ◇ (개선) 금융상품 정보 등 금융 마이데이터 내 정보 제공범위 확대 추진(예: 퇴직연금, 신탁·ISA 등) ◇ (기대효과) 소비자(3,000여만 명, 중복 포함)가 더 많은 정보를 통합 조회하여 효과적인 맞춤형 자산·재무관리 서비스 이용 가능 	금융위
13	대체거래소 (ATS) 인가매뉴얼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◇ (현황) ATS 인가요건 심사기준 관련 인가 매뉴얼이 없어 인가 신청에 애로 발생 ◇ (개선) ATS 인가 규정(자본시장법 등) 관련 세부 심사기준을 포함한 매뉴얼 마련 ◇ (기대효과) 신속하고 공정한 ATS 인가심사 → ATS 신설 촉진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(‘22.上 KRX 상장주식 일평균 거래대금 : 약 18.5조원) 	금융위

참고 2

과제별 추진 계획

번호	정책과제	일정	부처
----	------	----	----

① 현장애로 해소(10건)

1-1	조선소 협동로봇 안전성 규제개선 (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에 상응하는 가이드 마련·배포)	'22.8월	고용부
1-2	폐플라스틱 열분해유시설 산단입주 허용 (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고시('24.1월 개정))	'22.4분기	통계청
1-3	생분해플라스틱 활용기반 마련 (집중 활용 기준 및 대상 제품군 선정 등 가이드라인 마련)	'22.4분기	환경부
1-4	부정당 업체 입찰참가 이중제재 개선 (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)	'22.9월	중기부
1-5	유탄기업 신용보증 제도 개선 (국내복귀기업 및 심사방법 관련 신보 내부 규정 개정)	'22.9월	금융위
1-6	외국인 재학생 국내인턴 허용 (구직(D-10)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)	'22.8월	법무부
1-7	외국 우수 전문인력 취업업종 확대 (특정활동(E-7)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)	'22.10월	법무부
1-8	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·운영 규제 완화 (산학협력법 개정안 발의)	'23.3월	교육부
1-9	대기업 참여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 (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(고시) 개정)	'22.11월	중기부 문체부
1-10	호텔업 등급 결정기준 개선 (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(고시) 개정)	'22.12월	문체부

번호	정책과제	일정	부처
----	------	----	----

2 신산업(15건)

2-1	자율주행로봇 인도주행 허용 (지능형로봇법 개정(이후 도로교통법 개정('23))	'22.4분기	경찰청
2-2	드론 안전성 인증검사 단축 (초경량비행장치(드론) 기술기준(고시) 개정)	'22.4분기	국토부
2-3	AR·AI 기술접목 드론활용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(개인정보보호법 개정(계류중))	-	개보위 산업부
2-4	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지역 확대 (여객자동차법 개정(계류중))	-	국토부
2-5	자동차 무선 업데이트(OTA) 규제개선 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)	'22.4분기	국토부
2-6	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 마련 (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(KC 61851-1) 개정)	'22.4분기	산업부
2-7	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·운항 근거 마련 (선박안전법 및 수소법 개정안 발의('25년))	'22.4분기	산업부 해수부
2-8	친환경차 세제감면 절차 간소화 (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에 관한 규정(고시) 개정)	'22.10월	산업부
2-9	친환경차 보조금 인정절차 간소화 (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(고시) 개정)	'22.4분기	환경부
2-10	재생에너지설비 이격거리 완화 (재생에너지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, 필요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)	'22.4분기	산업부
2-11	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 옥상설치 허용 (건축법 시행령 개정)	'22.4분기	국토부
2-12	수소튜브 트레일러(T/T) 이용한 수소 유통 (수소법 개정안 발의)	'23.上	산업부
2-13	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구축 (전기용품 안전기준 KC60947-2(고시) 개정)	'22.4분기	산업부 과기부
2-14	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 개방 (민간개방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개선)	'23.上	행안부 경찰청 과기부
2-15	행정·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(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)	'22.8월	방통위 과기부

번호	정책과제	일정	부처
----	------	----	----

③ 보건·의료(8건)

3-1	병원박 휴대용 X선 활용 위한 사용기준 마련 (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)	‘22.4분기	복지부
3-2	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(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)	‘22.3분기	복지부
3-3	대형마트·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 (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발의)	‘22.4분기	식약처
3-4	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 (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)	‘22.4분기	식약처
3-5	인체유래 폐기물(폐치아·폐지방) 재활용 허용 (폐기물관리법 개정(계류중))	-	환경부 식약처
3-6	외국어표기 의료광고 허용지역 확대 (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개정)	‘22.4분기	복지부 문체부
3-7	의료협동조합 인가요건 개선 (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)	‘22.4분기	기재부 공정위 복지부
3-8	공유미용실 제도화 (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)	‘22.4분기	복지부

④ 환경(4건)

4-1	반도체 제조업 특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(반도체 업종 취급시설 설치·관리기준 고시 제정)	‘22.4분기	환경부
4-2	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활성화 (폐기물관리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)	‘22.4분기	환경부
4-3	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)	‘22.4분기	환경부
4-4	전기전자제품 제조시 재활용실적 인정 확대 (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)	‘22.9월	환경부

번호	정책과제	일정	부처
----	------	----	----

5 입지(7건)

5-1	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요건 완화 (산업단지 관리지침(고시) 개정)	'22.9월	산업부
5-2	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인정범위 확대 (항만법 개정안 발의)	'22.下	해수부
5-3	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 (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개정)	'22.下	해수부
5-4	숲속야영장內 숲속의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(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)	'22.10월	산림청
5-5	공익용산지內 농업용수개발시설 허용 (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)	'22.9월	산림청
5-6	민통선 이북 산지 치유의 숲 허용 (민통선산지법 시행령 개정)	'22.4분기	산림청
5-7	문화재 보호구역 개발행위 관련 규제 개선 (문화재보호법 행정규칙(훈령, 고시) 개정)	'22.11월	문화재청

6 금융(6건)

6-1	용역거래 안심결제업(결제대금예치업) 진입기준 완화 (전자금융거래법 개정(계류중))	-	금융위
6-2	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완화 (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)	'22.4분기	금융위
6-3	법인카드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허용 (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)	'22.10월	금융위
6-4	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허용 (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)	'22.4분기	금융위
6-5	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확대 (금융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)	'22.4분기	금융위
6-6	대체거래소(ATS) 인가매뉴얼 마련 (ATS 인가매뉴얼 마련)	'22.4분기	금융위

참고 3

과제별 부처 담당자

과제명	부처명	담당과장	담 당
【1. 현장애로 해소】			
1-1. 조선소 협동로봇 안전성 규제개선	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	김진숙 과장 044-202-8850	신정욱 사무관 044-202-8853
1-2. 페플라스틱 열분해유시설 산단입주 허용	통계청 통계기준과	우명제 과장 042-481-2060	이동훈 사무관 042-481-2052
1-3. 생분해플라스틱 활용기반 마련	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	서영태 과장 044-201-7340	이지선 사무관 044-201-7347
1-4. 부정당 업체 입찰참가 이중제재 개선	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	이희정 과장 044-204-7540	김종길 사무관 044-204-7545
1-5. 유턴기업 신용보증 기준 개선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이석란 과장 02-2100-2860	최성규 사무관 02-2100-2862
1-6. 외국인 재학생 국내인턴 허용	법무부 체류관리과	이승현 과장 02-2110-4055	박지원 사무관 02-2110-4067
1-7. 외국 우수 전문인력 취업업종 확대	법무부 체류관리과	이승현 과장 02-2110-4055	박지원 사무관 02-2110-4067
1-8.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·운영 규제 완화	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	장미란 과장 044-203-6883	김대성 사무관 044-203-6350
1-9. 대기업 참여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범위 확대	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	권영학 과장 044-204-7720	김종길 사무관 044-204-7723
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	강동진 과장 044-203-2411	안재민 사무관 044-203-2425
1-10. 호텔업 등급결정 기준 개선	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	하윤진 과장 044-203-2861	권용덕 사무관 044-203-2870
【2. 신산업】			
2-1. 자율주행로봇 인도주행 허용	경찰청 교통기획과	양우철 과장 02-3150-2051	손지원 경위 02-3150-0659
2-2.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 단축	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	민풍식 과장 044-201-4284	원정윤 사무관 044-201-4285
2-3. AR·AI 기술접목 드론활용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	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	김직동 과장 02-2100-3061	정종일 사무관 02-2100-3066
2-4.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지역 확대	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	김경현 과장 044-201-3364	한수증 사무관 044-201-3826
2-5.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(OTA) 규제개선	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	김은정 과장 044-201-3855	김태흥 사무관 044-201-3858
2-6.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 마련	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	장혁조 과장 043-870-5440	서인석 연구사 043-870-5444

과제명	부처명	담당과장	담 당
2-7.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·운항 근거 마련	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	황윤길 과장 044-203-3980	박경민 사무관 044-203-3985
	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	이창용 과장 044-200-5830	김세준 사무관 044-200-5838
2-8. 친환경차 세제감면 절차 간소화	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	남경모 과장 044-203-4320	박상욱 주무관 044-203-4325
2-9. 친환경차 보조금 인정절차 간소화	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	김호은 과장 044-201-6880	윤여솔 사무관 044-201-6882
2-10. 재생에너지설비 이격거리 완화	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	이재식 과장 044-203-5360	오승현 사무관 044-203-5366
2-11.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 옥상설치 허용	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	이진철 과장 044-201-3755	권순호 사무관 044-201-4750
2-12. 수소튜브 트레일러(T/T) 이용한 수소 유통	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	이옥현 과장 044-203-3950	배수린 사무관 044-203-3958
2-13.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시스템	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	진희철 과장 043-870-5440	김묘경 주무관 043-870-5446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	홍성완 과장 044-202-6120	민가홍 사무관 044-202-6156
2-14. 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 개방	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	이상민 과장 044-205-2741	박범수 사무관 044-205-2748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	홍성완 과장 044-202-6120	민가홍 사무관 044-202-6156
2-15. 행정·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	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	최윤정 과장 02-2110-1520	성재식 사무관 02-2110-1521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	홍성완 과장 044-202-6120	민가홍 사무관 044-202-6156
[3. 보건의료]			
3-1. 병원밖 휴대용 X선 활용 위한 사용기준 마련	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	송영조 과장 044-202-2450	김태경 사무관 044-202-2421
3-2.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	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	이선영 과장 044-202-2810	이예지 서기관 044-202-2802
3-3. 대형마트·백화점 건강기능식품 자유 판매	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	신영희 과장 043-719-2451	이해은 사무관 043-719-2452
3-4.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	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	신영희 과장 043-719-2451	이해은 사무관 043-719-2452
3-5. 인체유래폐기물(폐치아·폐지방) 재활용 허용	환경부 자원재활용과	마재정 과장 044-201-7380	민영우 사무관 044-201-7393
	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	채규한 과장 043-719-3752	서진원 사무관 043-719-3783
3-6.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지역 확대	보건복지부 해의의료담당관	변루나 과장 044-202-2980	최성필 사무관 044-202-2984
	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이순일 과장 044-203-2251	김지수 사무관 044-203-2252

과제명	부처명	담당과장	담 당
3-7. 의료협동조합 인가 및 감독 규제 개선	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	김홍섭 과장 044-215-5930	이창형 사무관 044-215-5934
	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	이동원 과장 044-200-4405	권혜지 사무관 044-200-4407
	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	박미라 과장 044-202-2470	변종석 사무관 044-202-2481
3-8. 공유미용실 제도화	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	김정희 TF팀장 044-202-2855	원지영 사무관 044-202-2859
【4. 환경】			
4-1. 반도체 제조업 특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	환경부 화학안전과	이형섭 과장 044-201-6831	심승우 사무관 044-201-6837
4-2.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활성화	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	홍경진 과장 044-201-7400	허지영 사무관 044-201-7401
4-3.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	환경부 자원재활용과	마재정 과장 044-201-7380	민영우 사무관 044-201-7393
4-4.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실적 인정	환경부 자원재활용과	마재정 과장 044-201-7380	소병훈 사무관 044-201-7384
【5. 입지】			
5-1.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요건 완화	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	이영호 과장 044-203-4430	오재열 사무관 044-203-4409
5-2.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인정범위 확대	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	이민석 과장 044-200-5750	김영주 사무관 044-200-5755
5-3. 해양산업클러스터 요건 완화	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	이민석 과장 044-200-5750	김수연 사무관 044-200-5757
5-4. 숲속야영장內 숲속의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	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	김종근 과장 042-481-4186	김숙희 사무관 042-481-4211
5-5. 공익용산지內 농업용수개발시설 허용	산림청 산지정책과	안병기 과장 042-481-4130	신건섭 사무관 042-481-4141
5-6.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에서 산림 치유의 숲 조성 허용	산림청 산지정책과	안병기 과장 042-481-4130	박승규 서기관 042-481-4123
5-7. 문화재 보호구역 개발행위 관련 규제 완화	문화재청 보존정책과	이종훈 과장 042-481-4830	이희영 사무관 042-481-4835
【6. 금융】			
6-1. 용역거래 안심결제업 (결제대금예치업) 진입기준 완화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	김종훈 과장 02-2100-2970	안영비 사무관 02-2100-2975
6-2.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완화	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	김종훈 과장 02-2100-2970	김종식 사무관 02-2100-2974
6-3. 법인카드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허용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이진수 과장 02-2100-2900	고선영 사무관 02-2100-2991
6-4.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	금융위원회 은행과	김연준 과장 02-2100-2950	권나림 사무관 02-2100-2954
6-5.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확대	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	신장수 과장 02-2100-2620	장지원 사무관 02-2100-2696
6-6. 대체거래소(ATS) 인가매뉴얼 마련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이수영 과장 02-2100-2650	류성재 서기관 02-2100-2651